

지난 40년동안 지속해온 양극(兩極)체제의 대결구조는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최근의 세계정세는 민족적 문제, 종교, 자원, 기술, 무역문제 등 여러가지 새로운 갈등요인등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정세를 보더라도 전환기적인 세력의 재편성 과정속에서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의 이해상충과 지역패권의 추구가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와 주변정세가 성격과 폭, 또 양(量)의 면에서 큰 변화가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은 혹시나 舊시대적인 발상과 타성, 안일무사한 사고방식 또는 헛된 기대심리에 빠져있다가,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적인 미아(迷兒)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절박한 우리로서는 전 국민적 의욕과 지혜를 결집시킬수 있는 국가목표의 설정과 이를 위한 국가전략의 추진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며, 지식과 과학기술의 힘이 국력(國力)의 척도(尺度)가 되리라는 것은 모두 절실히 공감(共感)하고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장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얼마만큼 유효하게 국력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국력의 강약(強弱)과 국운(國運)의 승패를 좌우하리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안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모두가 과학기술의 기반 여하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 유수(有數)의 선진국들은 새로운 종류의 전쟁, 즉 과학기술의 전쟁을 위해서 총력전 체제와 태세를 갖추고, 국가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진흥 및 국방연구개발 정책방향



崔世昌 국방부장관

“

방위산업 진흥 및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 국내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업체지원을 집중하였으며, 產·學·硯을 연결하는 범 국가적 연구체계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早期에 기술 선진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체제로 방산체제를 육성,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군사력의 질적 수준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공동체(EC), 일본 등 선진국들은 양극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국가 안보의 개념을 군사력 중심에서 핵심기술의 혁신 및 판리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후발국에 대한 기술보호 장벽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패권시대에 우리의 국가적 노력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위산업 진흥 및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몇가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점 국내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업체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국방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軍이 소요로 하는 모든 무기를 국산으로 조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독자개발을 통해 확보하고, 기존무기 중에서 선정된 주전투장비는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소재, 신물질,

전자, 광학, 소프트웨어 기술 등 핵심기술 및 부품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產·學·研을 연결하는 범 국가적 연구체계의 확대 강화입니다

지난 20년동안 국방과학연구소(國科研) 중심의 국방연구개발 활동을 점진적으로 방위산업체 주도로 전환해서, 민간연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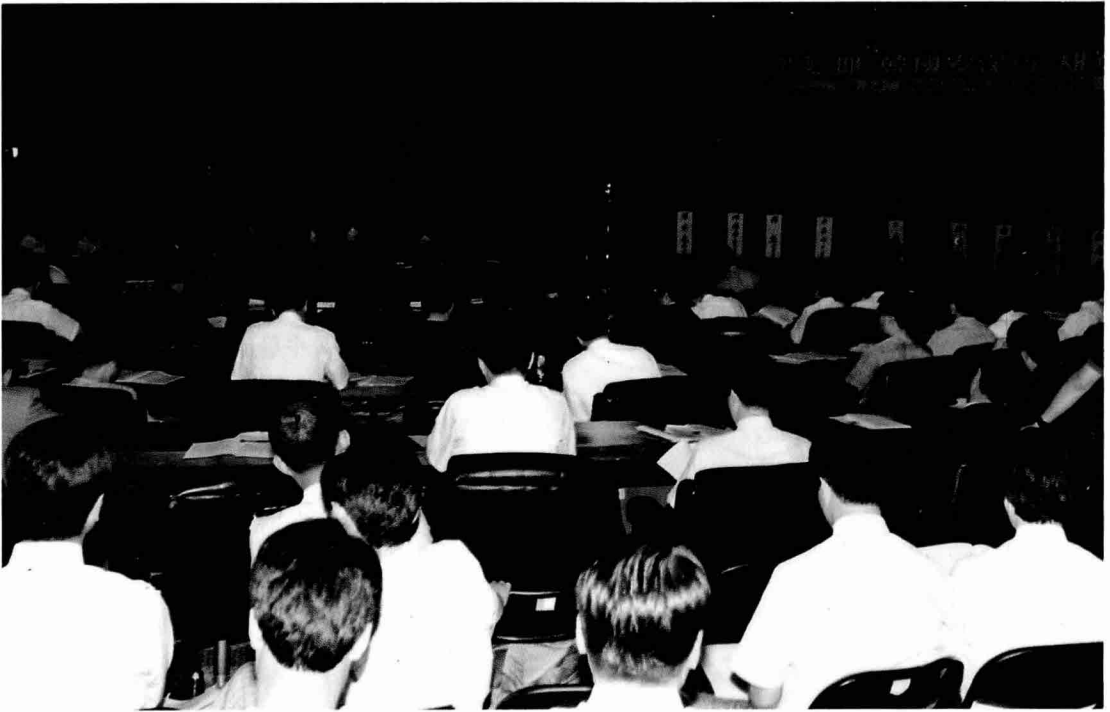
또한 지금까지 매우 부진했다고 생각되는 학계의 기초연구에 대한 위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비, 연구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전문분야별로 각 대학에 특화(特化)연구소를 육성할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초연구결과를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업연구소로 하여금 실용화할수 있도록 병행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어 국가종합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국방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방과학과 민수과학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발전될수 있도록 하며, 명실공히 국가과학기술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의 진흥 및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 국내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업체지원을 집중하겠으며 產·學·研을 연결하는 범 국가적 연구체계를 확대·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早期에 기술 선진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구매나 기술도입생산시에 핵심기술획득 위주의 절충교역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현재의 미국 일변도로 부터 유럽, 나아가 동구권등과 방산·군수협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획득된 기술의 체계적인 관리와 소요 기술의 식별, 기술자료의 공유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금년부터 기구개편을 실시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기술정보센타를 편성, 설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술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체제로

방산체제를 육성,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방산업체가 보호육성의 차원에서 관리되어 왔다고 하는 측면이 너무 크지 않았나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된 물자중심체제에서 전문분야별 기술중심의 전문화, 계열화 체제로 재정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시에도 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될수 있도록 정부예산의 先투자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의욕적인 연구를 실시하려고 하였 습니다만, 여러 어려움이 뒤따랐고, 정부의 입 장에서는 업체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깊이 해보고 있습니다.

또 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너무나 열악한 방위산업 육성 기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2천억원 정도의 규모로 이 기금을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이와같은 국방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이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석 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원, 또 과학기술과 방산업체에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앞으로 국가의 흥패(興敗)와 국방의 기반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공감(共感)을 가지시고 각별한 노력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